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 중소기업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 김영호 국회의원 주최, 한국상생제조연합회 ·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
공동주관으로 30일 개최
- 한경희 협회장 “안전 투자는 규제 비용 아닌 공급망 지키는 산업경쟁력
투자” 강조
- 화재예방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 국회에 관련 사업 편성, 예산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지난 30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 문화협회와 공동 주관한 ‘물류시설 화재 예방 및 산업안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복되는 물류 · 제조 현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상연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과 납품 지연 등 산업 공급망 전반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물류 시설의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모든 참석자가 화재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소 물류 · 제조 현장은 오래된 건물과 전기설비 비중이 높음에도 시설 개선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며 “화재 발생 후 진압과 복구에 의존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기적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를 단순한 규제 비용이 아닌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산

업경쟁력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동준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는 중소 물류 시설의 구조적 위험성을 통계로 입증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매년 1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중소 물류 시설 화재를 막으려면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상대적으로 자체 시설 개선과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 시설을 위한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교훈 수석전문위원(한국상생제조연합회)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한 전문위원은 “중소 제조·유통기업에 화재는 기업의 생명을 옥죄는 일이므로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에서 화재 예방 등 안전 문화가 정착하려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정부와 국회의 영세 중소기업 대상 소방안전설비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안전 투자 적극 이행 기업 대상 행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현장 맞춤형 화재 예방 컨설팅과 근로자 유형별 교육 콘텐츠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상연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토론회 사진 2장



한경희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회장이 30일(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물류시설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 한상연)



30일(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물류시설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중이다.(사진=한상연)